

한일 양국의 官報를 통해서 본 초등교육정책

안병곤*
bgan@gnu.ac.kr

<目次>

- | | |
|-------------------------|-------------|
| 1. 서론 | 3.2 정보화사회대응 |
| 2. 한일 양국의 기초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 | 3.3 인성교육지원 |
| 3. 한일 양국의 초등교육정책 | 4. 결론 |
| 3.1 기초교육증진 | |

主題語: 관보(Official Gazette), 초등교육정책(Elementary Education Policy), 기초교육증진(Enhancement in Fundamental Education), 정보화사회대응(Cope with a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인성교육지원(Human Educational Support)

1. 서론

기초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¹⁾은 학업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학습태도와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출발점이다. 또한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적 기초, 학문적 기초, 건강한 삶으로서 신체적 기초, 사회적 존재로서 협동적 기초, 국가민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국민적 기초를 다지고 방향설정을 탐색하는 기초교육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초등교육은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학문과 인간의 제 영역에서 기초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초적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의 官報에 수록되어 있는 학교교육 정책 중 초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기초교육증진을 위한 정책, 정보화사회대응을 위한 정책, 인성교육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정책으로 기초교육증진을 위한 정책에서는 창의력 개발, 맞춤형교육, 외국어교육강화 분야를 고찰하고 정보화사회대응을 위한 정책에서는 정보화교육환경구축, 교육콘텐츠개발, 정보화능력향상 분야를, 그리고 인성교육지원을 위한 정책

* 경상대학교 대학원 일본학과 교수, 경상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일본문화연구센터 책임연구원

1) 한국의 초등교육기관은 ‘초등학교’이고, 일본은 「小學校」이다.

<표 1> 초등교육관련 官報자료 추출 현황(1981-2010, 30년 간)

구분	교육관련자료건수		교육관련자료제외건수		계	초등교육		계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981	58	149	30	41	278	2	1	3
1982	45	147	25	45	262	3	3	6
1983	43	119	28	51	241	3	2	5
1984	40	179	29	45	293	5	8	13
1985	39	148	31	45	263	2	3	5
1986	38	165	38	54	295	5	7	12
1987	38	142	25	38	243	7	2	9
1988	48	145	24	45	262	6	5	11
1989	52	189	23	47	311	6	10	16
1990	44	164	19	43	270	3	2	5
1991	75	200	20	30	325	8	4	12
1992	73	173	23	42	311	9	2	11
1993	74	165	24	37	300	14	7	21
1994	77	175	25	47	324	6	8	14
1995	104	177	31	43	355	8	6	14
1996	95	186	31	45	357	11	7	18
1997	114	179	24	43	360	16	14	30
1998	116	220	26	47	409	11	13	24
1999	96	222	36	66	420	10	20	30
2000	99	233	44	126	502	12	8	20
2001	139	133	81	87	440	0	6	6
2002	93	130	74	59	356	5	9	14
2003	94	138	74	58	364	17	11	28
2004	149	97	62	74	382	11	9	20
2005	136	95	51	52	334	12	13	25
2006	132	91	56	35	314	18	11	29
2007	171	88	57	57	373	22	18	40
2008	183	96	38	52	369	22	15	37
2009	136	81	101	55	373	17	12	29
2010	134	68	45	51	298	16	8	24
계	2,735	4,494	1,195	1,560	9,984	287	244	531

에서는 기초예절교육, 특기적성교육, 교육공동체 분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초등교육정책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선정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은 구체적인 직업을 위한 특수한 사회적 기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기초보통 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위의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의 官報에서 추출한 교육관련 자료 9984건 중 531건(5.3%)의 초등교육정책 부분을 연구대상으로 한다.²⁾ 연구기간은 2011년 및 2012의 2개년으로서 2011년에는 ‘평생교육정책’, ‘고등교육정책’, 2012년에는 ‘중등교육정책’, ‘초등교육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의 「官報」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앞서 제시한 초등교육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양국의 상대적 특징과 상호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한일 양국의 기초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

초등교육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자질을 닦는 과정으로 가장 기초적인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국민교육 또는 보통교육으로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을 배양하는 기초교육이다. 이와 같이 초등교육은 아동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사회의 효과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본질은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나 어떤 특별한 직업을 위한 준비보다는 아동이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1)초등교육의 내용은 이미 아동이 습득한 지식을 내용, 과정보로 구조화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에서 볼 때 초등교육은 중등교육의 지식의 심화발전과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2)초등교육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다. 먼저 아동은 인식 능력이 아직 미분화된 상태이므로 통합지향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지식은 아동의 경험과 교육내용

2) 초등교육 관련 자료가 작은 이유는 한일 양국 모두 국가의 정책적인 관점에서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류영길(2011) 「韓日 兩國의 官報를 통해서 본 平生教育政策 연구」『日語日文學』51 대한일어일문학회, pp.219-243

류영길·안병곤(2011) 「韓日 兩國의 官報를 통해서 본 高等教育政策 연구」『比較日本學』25, 日本學國際比較研究所, pp.1-24

류영길·안병곤(2012) 「韓日 兩國의 官報를 통해서 본 中等教育政策 연구」『日本語文學』56, 日本語文學會, pp.287-310

이 교과와 교과가 통합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3)초등교육은 기초기본 교육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초기본교육은 인간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초등교육은 교육내용, 방법, 대상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초등교육정책은 이를 보장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초등교육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인정할 때 보다 아동에 대한 교육력은 확장될 수 있다.

초등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공식교육으로서 국가에 따라서 그 조직과 제도의 틀은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초등교육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공통된 성격이 있다. 그것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국민교육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보편화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초등교육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세계 인권공동선언 제26조와 제6공화국 헌법 제31조 등에 명문화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무상교육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한일 양국의 초등교육정책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교육은 1980년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교육혁신을 4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하면서 교육 정상화를 위한 7·30교육개혁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교육심의회를 설치하여 21세기를 향한 교육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교육개혁심의회는 1985년 3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어 1987년 12월 말까지 존속하면서 총 42개의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1980년 7월 30일 정부는 ‘교육 정상화 및 과열과의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개혁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고교 내신 성적 점차 확대 반영 2)초·중등학교 교과목 수를 축소하고 학습내용과 수준 조정 3)졸업정원제 실시 4)전일 수업제 대학의 운영 5)대학 입학 정원의 확대 6)방송통신 교육의 강화(학사과정 신설) 7)교육대학의 수업 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8)과밀학급 해소, 중학교의무교육 실시, 사학 지원, 학력평가 관리기구 설치 등이다. 또한 초등교육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1980년대 초 교육의 선진화 구호를 내걸고 교실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교육을 중요 교육정책의 하나로 설정하고 초·중등학교 기초과학 교육의 강화를 위해 노력한 시기이다.

일본의 초등교육은 1976년 「教育課程審議會답신」의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인 「學習指導要領」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1980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는 이러한 「新學習指導要領」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新學習指導要領」은 수업시수를 줄이고 여유로운 학교생활 속에서 아동이 기초적, 기본적인 내용을 배워 知德體의 조화를 취할 수 있는 국민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립의 의무교육제 학교의 학급편제 및 교직원 정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4차에 걸친 개선계획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개선과정을 통한 성과를 근거로

1980년부터 제5차 개선계획을 만들어 40명 학급의 실현을 포함한 학급 편제의 개선, 교감 정원 및 초등학교의 전공교원 정원의 개선, 무면허담당교원의 해소, 사감, 양호교원, 학교영양 직원 및 사무직원 정원의 개선을 시행한 시기이다.

다음은 1990년대 한일 양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흐름이다. 먼저 한국의 경우 교육개혁위원회는 1994년 2월 5일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발족되었다.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열린교육,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 육성, 교육재정 GNP 5% 확보, 신 직업교육 체제의 구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교육관계 법령체제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개혁심의회가 한국교육전반에 걸친 문제를 분석하여 2000년대를 향한 교육개혁 청사진을 건의한 바에 따라 교육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심의기구로서 1988년 5월 교육부장관 자문기구로 중앙교육심의회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주요 개혁과제는 유아교육체제 정립, 초·중등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제도 개선, 사립학교법 개정, 교장 임기제 실시 방안, 교육공무원 승진 평정, 우수교육 확보 방안 등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1996년부터 당시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였다. 이는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일제의 황국신민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제의 청산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초등학교에 ‘책가방 없는 날’을 도입해 시행한 것은 1995년도 교육부의 주요 업무보고에서 제기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이 1995년부터 시행되면서 국가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이 단위학교 교육과정중심으로 전환된 것과 동시에 학교경영에 대한 자율의 폭이 확대되어 1986년부터 자발적으로 실천·확산되어 오던 열린교육이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21세기에 대비한 역량 있는 국가로 발전하고 과학기술입국, 문화입국 목표를 위해서는 모든 사회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교육의 역할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개혁은 정부의 6대개혁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文部省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 개혁에 임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 형태를 고쳐 정의감이나 윤리관 등 인성을 양성하는 교육을 중시하였다. 둘째, 전후 지나친 평등주의로부터 벗어나 아이들의 개성·능력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셋째, 과학기술입국을 목표로 하여 기초과학 연구 및 첨단과학기술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文部省에서는 1997년 「教育改革プログラム」을 만들어 제도개정과 관련 정책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에 관한 문제로 집단 괴롭힘이나 등교거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학교, 가정, 지역이 일체가 되어 대책을 세워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 시기이다.

다음은 2000년대 교육정책의 흐름이다. 먼저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교에, 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로 규정한 것을 “만 6세부터 9년간(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취학시켜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중·고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외의 필요한 보직교사 증가배치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 및 국립학교의 장에게 이양하여 교육자치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초등학교에 보직교사를 증가배치 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고 재능우수자의 조기진급,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의 부여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도모하였다. 넷째, 초·중등학교의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의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인력의 확충을 위하여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유치원 2급정교사는 제외)로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법률 제7701호(2005.12.07)로 개정하는 등 초등학교의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교육개혁을 1)신헌법 제정, 교육기본법의 제정, 학교 교육법 제정 등의 전후 교육개혁의 시기 2)전후 부흥기부터 고도 성장기에 걸친 교육의 양적 확대, 대중화와 제도의 정비 확충의 시기 3)고도 성장기의 종료와 성숙화 사회로의 이행, 새로운 교육 문제에 대한 대응의 시기 4)임시교육심의회의 설치 이후 교육개혁 국민회의의 설치와 그 보고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로 나누어 개관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기회 균등의 이념을 실현해 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여 경제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현재는 따돌림에 의한 등교거부, 청소년 범죄, 「公」을 경시하는 풍조, 지나친 평등주의에 의한 아이의 개성능력에 대응한 교육의 경시, 교육 시스템이 시대나 사회의 진전으로부터 뒤처지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는 등 교육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文部科學省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개혁국민회의의 제안을 근거로 ‘교양, 창의력, 새로운 학교 만들기’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교육개혁을 진행시켰다.

3. 한일 양국의 초등교육정책

한일 양국의 官報 중 초등교육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 官報의 교육관련 모든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위의 <표3>과 같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官報에 나타나는 초등교육을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교육정책별로 분류해 본 결과 기초교육증진을 위한 정책은 371건, 정보화사회대응을 위한 정책은 79건, 인성교육지원을 위한 정책은 23건, 기타 58건으로 정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1 기초교육증진

한일 양국은 초등학교의 기초교육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교육의 기초교육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은 창의력개발, 맞춤식교육, 외국어교육강화 등으로 나누어 분석, 고찰할 수 있다.

먼저 초등교육의 창의력개발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교육에서는 창의력 개발 증진을 위해 주요 과목에 토론·컴퓨터·음악·미술 등의 과목을 더한 특성화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즉 창의력개발 정책에서는 총 15건의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본의 경우는 「初中等教育の教育施策」³⁾ 등 9건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⁴⁾ 등 6건의 관련 정책이 제시되었다. 양국에서 제시된 정책의 비율에서는 한국 40%, 일본 60%로 한국보다 일본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이들의 지식·기능 및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은 국제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학습 의욕이나 수업시간 등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수업의 이해도와 만족도는 학년이 상승함에 따라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위해 향후의 교육은 기초기본교육을 철저히 하여 그것을 기본으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양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⁵⁾ 이에 따라 교육당국의 「新學習指導要領」은 1)수업시간의 축소와 교육 내용의 엄선 2)종합적인 학습 시간의 개설 3)선택 학습의 폭 확대 4)아동 개개인에 대한 지도의 충실 5)체험적, 문제해결적인 학습활동을 중시할 것 등의 조치를

3) 官報 第16328号 付録, 1981年 7月 1日, 文部省

4) 官報 第9028号, 문교부고시 제442호,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5) 官報 第3319号 付録 平成14年(2002) 3月 13日 文部科学白書のあらまし「才能の伸長や創造性の育成」を目指して, 文部科学省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新學習指導要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 아동의 학습과 교육과정의 시행 상황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 소수인원의 지도나 수준별 학습 등 아동 개인에 대한 지도를 추진하기 위해 교직원 정수의 개선과 시설의 정비 등 교육조건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초등학교의 창의력개발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⁶⁾ 추진배경을 보면 첫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미래 교육은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고 키워주는’ 교육의 핵심에 ‘창의성’과 ‘인성’이 존재한다. 둘째, 국가 발전전략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거의 성장은 ‘모방형 인적 자본’이 주도하였으나 미래의 성장동력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 내는 ‘창조적 인적 자본’에 있다. 셋째, 교육 여건 변화이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입학사정관제의 시행에 따라 교과 위주, 점수 위주 교육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충실히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창의·인성교육 실천방안으로는 첫째, 교과활동에서의 창의·인성교육 강화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운영, 즉 학생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은 초등학교의 창의력개발 정책에서 다양한 개성과 특출한 능력을 가진 인재양성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시행방법에서는 양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은 아동 개개인의 자질이나 재능을 살리는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주요 교과과목 위주의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토론·컴퓨터 등 특성화 교육도 함께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일 양국에서 창의력개발 정책이 시행된 배경으로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국가 발전전략 변화, 교육 여건 변화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맞춤형교육이다. 한일 양국은 초등교육에 있어서 아동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 농촌과 도시의 지역편차, 학습부진아교육, 수월성교육 등 교육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개개인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교육하는 여러 가지 맞춤형교육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교육의 맞춤형교육 정책에서는 총 15건의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본의 경우는 「學校教育に関する政策」⁸⁾ 등 8건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는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1종 및 2종 도서결정」⁹⁾ 등 7건의 관련 정책이 제시되었다. 양국에서 제시된 정책의 비율에서는 한국 47%,

6) 교육과학기술부(2011) 「창의인성교육기본방안」, pp.1-56

7)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활용(2010. 10. 03. 개통)

8) 官報 第3472号 付録, 2002年 10月 23日, 内閣府

9) 官報 第13886号, 1998年 04월 21일, 교육부고시제1998-5호, 교육부

일본 53%로 한국보다 일본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은 1998년 초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에 지적 호기심이나 탐구심을 가지고 스스로 배우는 능력, 스스로의 힘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의 육성을 중시하여 체험적인 학습을 적극적으로 각 교과에 도입하여 2002년도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에 「理科」, 「圖畫工作」이라는 교과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新學習指導要領」에서는 관찰·실험이나 과제학습 등의 체험적·문제 해결적인 학습을 중시하여 배우는 의욕이나 지적 호기심, 탐구심을 높여 이과를 좋아하는 아동이 증가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文部科學省에서는 초등교육의 충실을 위해 기초학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도덕교육, 체험활동의 충실, 환경교육의 추진, 풍부한 과학적 소양의 육성, 독서 지도 등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진로 지도의 개선, 유아기에 어울리는 교육의 추진, 장애가 있는 아동 개개인의 요구에 대응한 교육, 인권 교육의 추진, 보다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제도의 충실개선, 우수한 교원의 확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의 정비와 교재의 정비 등을 시행해 초등교육의 충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진행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¹⁰⁾

한국의 경우는 맞춤형교육과 관련하여 「EBS, 초등·중학생 대상 인터넷 맞춤형교육 서비스」와 「사이버가정학습」을 들 수 있다. EBS 초등·중학 서비스사이트는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서비스는 학습자는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고, 학습 진도율은 물론 좋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것까지 자동차의 계기판이나 항공기의 조종실처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학습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생애주기 서비스도 제공한다.¹¹⁾ 서비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이며 교과목으로 공통 서비스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의 주요 5개 교과이고, 시도별 특색 서비스로는 논술, 영어회화 등 이다. 주요 서비스¹²⁾는 학습콘텐츠, 학습관리시스, 사이버 선생님, 진단·처방 학습 관리 시스템 및 문제은행, 화상·상담시스템 등이다.

10) 官報 第3572号付録 平成15年 3月 26日 資料版 No. 2308 文部科学白書のあらまし 新しい時代の学校 -進む初等中等教育改革-, 文部科学省

1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83113194409580>

12) 1) 학습 콘텐츠 -수준별 콘텐츠(기본, 보충, 심화) 제공을 통한 학습자 수준별 맞춤 학습 지원, -논술, 영어회화, 한자, 창의성 등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 서비스 2)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학습 지원 및 관리 3) 사이버선생님 -현직 초·중등 교사들로 구성된 사이버선생님의 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 -학습 독려 및 질의/응답 등 다양한 학습활동 지원을 통한 효과적 학습 유도 4) 진단·처방 학습 관리 시스템 및 문제은행 -학습자 학력 및 학습습관을 다면적으로 진단분석,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 학습 자료 제공 -문제은행을 통한 시험지 생성 및 자동채점, 오답노트 서비스 제공 5) 화상·상담시스템 -화상 전송을 통한 실시간 강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전자질판, 자료 및 웹 공유 등을 통한 다양한 실시간 학습 활동 가능(<http://cyber.edunet.net>)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은 초등학교의 맞춤형교육 정책에서 아동 개개인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적용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시행방법에서는 양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은 체험적인 학습을 적극적으로 각 교과에 도입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인터넷 맞춤형교육 서비스와 사이버가정학습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일 양국에서 맞춤형교육 정책이 나온 배경으로는 교육환경의 진전에 따라 아동 개개인의 수준과 능력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교육계의 공감대가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초등교육의 기초교육증진을 위한 정책 중 외국어교육강화이다. 우리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대외개방정책을 가속화함에 따라 일상생활 및 업무에서 외국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외국어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다. 초등학교의 외국어교육강화와 관련한 정책에서는 총 18건의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본의 경우는 「學校教育の國際理解教育の推進」¹³⁾ 등 9건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는 「초등학교 교과교과용도서 영어 구분 고시 개정」¹⁴⁾ 등 9건의 관련 정책이 제시되었다. 양국에서 제시된 정책의 비율에서는 한국 50%, 일본 50%로 양국이 동등하게 나타났다.

일본 文部科学省에서는 외국어교육과 국제이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歸國外國人兒童學生とともに進行する教育の國際化推進地域事業」을 시행하고 있다.¹⁵⁾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2003년 3월에 책정한「英語ができる日本人の育成のための行動計画」¹⁶⁾에 근거해 영어 수업의 개선 및 영어 교원의 지도력 향상에 관한 관련 시책을 추진하였다. 또 영어 이외의 외국어교육에 대해서도 2002년부터 고등학교에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탄력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고등학교 외국어교육 다양화 추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内閣部에서는 국제청소년육성교류사업, 일본-중국 청소년 친선교류사업, 일본-한국 청소년 친선교류사업 등의 청소년에 대한 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外務省에서는 해외청소년초청사업(JET프로그램)을 단기초청 및 장기초청 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ASEAN 국가의 청소년을 초청하는 사업인 21세기를 위한 우정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청소년해외협력대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이 강조되고 국가 차원에서 영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영어교육 강화 추진팀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만

13) 官報 第3847号 付録, 2004年 5月 12日, 法務省, 文部科学省

14) 官報 第13939号, 1998年 06월 25일, 교육부고시 제1998-9호, 교육부

15) 2005년 33개 지역에서 시행. 官報 第4532号付録 平成19年 2月 28日 資料版 No.2507 人權教育啓発白書のあらまし 法務省·文部科学省

16) 『英語が使える日本人』の育成のための行動計画 官報 第4532号付録 平成19年 2月 28日 法務省·文部科学省

졸업하면 기본 생활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다양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영어교육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1)교원·교육과정·교육환경 등 종합적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2)학생들의 영어능력과 교원 상황 등 공교육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교육과정, 평가제도 개선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3)학생 및 학부모의 영어교육 수요가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4)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부모의 소득 격차와 지역간 격차가 영어학습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산어촌 지역과 대도시 저소득층 지역 등에 우선 지원하고 5)국가는 교원·교육과정·교육환경 개선 등 공교육 여건 개선과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며 6)시·도교육청과 학교 수준에서는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책임지고 추진한다는 것이다.(이홍수 2008:1-3)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등학교의 외국어교육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을 官報에 입법예고¹⁷⁾하는 등 외국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을 바탕으로 해외유학·어학연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고품질·저비용의 영어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를 만들어 다양한 수익모델의 창출로 자립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외국어 교육 강화에 대한 정책을 官報에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초등학교의 외국어교육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면적은 62,108㎡, 구성 비율은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관련 건물은 4개 동으로 나타났다.¹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의 초등교육에서 외국어교육강화 정책이 시행된 것은 사회의 모든 부분이 국제화·글로벌화 되어 감으로 인하여 외국어교육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외국어교육강화 정책의 시행방법에서 일본은 유학생과 국제교류를 통하여 아동의 외국어교육을 지원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초등영어몰입교육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17) 2002년 말 현재 65국에 2,420을 파견중이다. 官報 第3472号付録 平成14年 10月 23日 資料版 No.2287 青少年학기술부공고제2009-130호, 2009년 4월21일

18)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官報 제 17178호 2010년 01월 20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1호, 국토해양부

3.2 정보화사회대응

한일 양국은 초등교육에 있어서 정보화사회대응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보화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정보화사회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은 정보화교육환경구축, 교육콘텐츠개발, 정보화능력향상 등으로 나누어 분석 고찰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정보화교육환경구축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총 14건의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본의 경우는 「情報化の進展と教育の對應」¹⁹⁾ 등 11건의 정책이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는 「원격교육설비기준」²⁰⁾ 등 3건의 관련 정책이 제시되었다. 양국에서 제시된 정책의 비율에서는 한국 21%, 일본 79%로 한국보다 일본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최근 급속한 정보화의 발전에 의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가 진행되어 21세기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기르는 학교교육에서도 정보화에의 대응을 최대 중요과제의 하나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밀레니엄·프로젝트 교육 정보화를 중심으로 모든 학급의 모든 수업에 대해 교원이나 아동이 컴퓨터·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²¹⁾ 이를 위해 文部科學省에서는 1)교육위원회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한 주체적인 교육행정을 전개하여 교육위원회의 활성화 도모 2)학교운영에 지역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학교평의원제도를 도입하여 열린 학교 만들기를 추진함과 동시에 학교의 자기평가 시스템 확립 3)교장의 리더십을 통해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를 주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사예산에 대한 학교의 재량 확대 4)교원의 능력이 적절히 평가되고 치우칠 수 있는 평가시스템 정비 5)교원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연수 시스템 및 경쟁적 환경 정비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²²⁾

한국의 경우는 1996년도부터 2단계에 걸쳐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을 시행하여 모든 학교에 PC와 인터넷 등의 물적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에듀넷 등을 통해 ICT활용 교수학습 자료와 방법을 보급함으로써 교육정보화환경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우수한 정보화 환경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이러닝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5년 3월 중순부터는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방과후 온라인 자율학습체제인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를 시행하여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19) 官報 第3号付録, 1981年 1月 11日, 文部省

20) 官報 제16735호 2008년 04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93호 교육과학기술부

21) 官報 第3040号付録 平成13年 1月 24日 資料版 No. 2197 平成12年度「我が国の文教施策」(教育白書)は、平成12年11月14日の閣議に報告され、同日公表された。文部省

22) 官報 第3319号付録 平成14年 3月 13日 資料版 No.2255 文部科学白書のあらまし 文部科学省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e-러닝활성화를통한국가인적자원개발추진전략」에서는 e-러닝을 통한 공교육 보완 혁신, e-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핵심인력양성, e-러닝의 국제화 등 정보화 환경구축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각 추진목표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 국민의 지식기반사회 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 정보 활용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사이버 공간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우수한 정보통신 산업 인력 양성체제를 강화하여 교육·훈련과 자격, 생업을 연계하는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정비하고 학술정보 생산 표준화와 유통체제 구축으로 OECD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함께하는 정보문화 창달 측면에서 모든 국민이 정보문화의 창달에 동참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사이버 시민의식을 갖추게 하고 소외 지역·계층의 정보문화 생활을 지원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넷째, 종합적 성과지원체제 구축에서는 전 국민이 학습과 일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 평가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법·제도적 개선을 추구하며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OECD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전자 교육행정체제 구현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²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은 초등학교의 정보화교육환경구축 정책에서 미래 정보사회에 대비한 아동의 교육정보화환경구축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시행방법에서는 양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은 밀레니엄·프로젝트 교육정보화를 중심으로 모든 학급, 모든 수업에 대해 교원이나 아동이 컴퓨터·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을 시행하여 모든 학교에 PC와 인터넷 등의 물적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에듀넷 등을 통해 ICT활용 및 보급을 함께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일 양국에서 정보화교육환경구축 정책이 시행된 배경으로는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이 교육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다양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교육콘텐츠개발 정책이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미디어 기기의 양산에 따라 과거 산업사회에서 형성된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교육방식에서 선택적,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전환하여 각자 또는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일 양국은 교육콘텐츠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교육콘텐츠개발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총 12건의 정책이 제시되었는데 이 가운데 일본의 경우는 정보화의 진전과 교육·학술문화스포츠²⁴⁾ 등 9건의 정책이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는 「국가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법안」²⁵⁾ 등

23) 교육과학기술부(국가기록원<http://contents.archives.go.kr>), 「정보화추진사업」, pp.1-201

24) 官報 第2805号 付録, 2000年 2月 9日, 文部省

3건의 관련 정책이 제시되었다. 양국에서 제시된 정책의 비율에서는 한국 25%, 일본 75%로 한국보다 일본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은 정부의 「e-Japan戰略」에 근거해 학교의 IT환경이 갖추어져 창의성 수업 실천이 가능해진 반면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정보화 진척도에 격차가 나타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역, 교육 관계자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총력을 기울여 교육정보화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 분야에서는 「新學習指導要領」에 따라 정보교육의 충실, 교육용 컴퓨터의 정비, 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을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²⁶⁾ 또한 21세기에 걸맞은 교육 및 학교 창조, ICT 산업 개발을 통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육의 초기 모델로 디지털 콘텐츠와 스마트 기기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과제로는 디지털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구 지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다.

한국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²⁷⁾을 보면 기존 책자형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실수업 개선과 학생별 맞춤형 교수학습을 위한 디지털교과서²⁸⁾를 개발 및 적용, 교육체제의 유연성이 강화되고 개인의 적성 및 미래의 직업과 연계된 맞춤형 학습 구현으로 꿈의 학교·행복한 교실, 흥미학습 실현,²⁹⁾ 클라우드 교육서비스를 기반으로 공공기관·민간 및 개인이 개발한 풍부한 콘텐츠를 교육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학습자원의 공동 활용과 협력학습 기반 마련, 변화된 기술 및 제도 등 교육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교사 역량 고도화를 위한 교원연수지원체제 구축과 예비교사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은 초등학교의 교육콘텐츠개발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디지털교과서개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시행방법에서는 양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기기보급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교실수업 개선과 학생별 맞춤형 교수학습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정보화능력향상 정책이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하여 컴퓨

25) 官報 第13409号, 1996년 09월 10일, 교육부공고제1996-49호, 교육부

26) 官報 第4089号 付録 平成17年 5月 11日 資料版 No.2415 平成16年度 文部科学白書のあらまし 文部科学省.

27) 교육과학기술부(2011) 「(인재대국으로 가는 길)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

28) 교과내용과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공책,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등의 기능을 연계한 미래형 교과서 정보기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고, 수업 방식이 다양해져 학습 선택이 최대한 보장되는 교육복지 정착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계(교육과학기술부, 2011)

29) PISA 2009 평가 결과 읽기 1-2위, 수학 1-2위, 과학 2-4위(OECD 국가 중). 그러나 학습흥미, 자신감, 동기 등에서 평균 이하(PISA, 2006; TIMSS, 2007)

터와 각종 정보기기,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생성하고, 처리, 분석, 검색,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컴퓨터와 학습을 연계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초등교육의 정보화능력향상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총 12건의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본의 경우는 “정보, 잘 모으고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³⁰⁾ 등 8건의 정책이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는 「자격 기본법 시행령안」³¹⁾ 등 3건의 관련 정책이 제시되었다. 양국에서 제시된 정책의 비율에서는 한국 25%, 일본 75%로 한국보다 일본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은 2006년 官報의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會の新しい展開」³²⁾에서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2006년 이후 정부가 임해야 할 새로운 IT전략으로서 2006년 「IT新改革戰略(IT戰略本部決定)」을 만들어 교육정보화 추진과 고도IT 인재의 육성을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둘째,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에 대한 과도한 의존, 유해 정보의 범람 등의 정보화의 어두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셋째, 청소년의 자립·도전을 위한 액션 플랜 시책의 하나로서 經濟産業省, 厚生労働省과 제휴·협력하고, IT의 활용에 의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넘어 직업능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풀뿌리 e러닝 시스템의 구축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文部科學省에서는 정부의 「e-Japan 戰略」 등에 근거해 2005년까지 세계 최첨단의 IT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교육, 과학기술학술, 문화의 각 분야에 정보화에 관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1)미래의 정보사회를 담당하는 아이들을 위해 「新學習指導要領」에 정보교육을 강화하고,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추진 2)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의욕이나 흥미·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IT환경 정비와 교원의 IT지도력 향상 3)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학습 활동 기회의 확대와 IT를 활용한 교육의 보급·촉진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위해 교육의 다양화·첨단화를 추구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1~4학년까지 재량활동을 통하여 정보통신기술 교육이 1주당 1시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컴퓨터 교육에 배정하고 5~6학년의 경우 재량활동, 특별활동, 실과교과 내의 컴퓨터관련 영역 시간을 활용하여 주당 1시간 정도의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된 교과 형태의 컴퓨터 교육이 단계별 체계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2005년 개정된 정보통신기술교육은 소양교육과 교과 활용교육으로 나누고,

30) 官報 第17976号 付録, 1987年 1月 21日, 総務庁

31) 官報 第13616号, 1997年 05월 24일, 교육부공고제1997-34호, 교육부

32) 官報 第4373号付録 平成18年 7月 5日 資料版 No.2474 平成17年度 文部科学白書のあらまし文部科学省

소양교육에서는 컴퓨터과학 및 정보통신윤리 분야를 강화하며 소양교육과 교과활용 교육 간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은 초등학교의 정보화능력향상 정책에서 잘 갖추어진 IT환경을 기반으로 미래를 개척할 아동의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해 컴퓨터나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재양성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시행방법에서는 일본은 정부의 「e-Japan 戦略」을 근거로 하여 세계 최고의 IT국가를 목표로 교육, 과학기술, 문화 등 각 분야에 정보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반면 한국은 교육의 다양화 첨단화를 추구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보화능력 향상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3 인성교육지원

최근 초등학생에 대하여 수학·과학 등의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토론·컴퓨터·음악·미술 등 인성·특성 교육도 그 중요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일 양국은 초등교육에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인성교육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은 기초예절교육, 특기적성교육, 교육공동체 등으로 나누어 분석 고찰할 수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물질만능과 이기주의, 지식위주교육, 초고속인터넷문화 등으로 예절교육이 경시되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예절문화를 익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도덕 불감증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할 만큼 팽창하여 아이들에게 기초예절교육의 필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초등교육의 기초예절교육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총 12건의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본의 경우는 「青少年問題の現象と對策」³³⁾ 등 9건의 정책이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는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生活記錄簿取扱要領解説」³⁴⁾ 등 3건의 관련 정책이 제시되었다. 양국에서 제시된 정책의 비율에서는 한국 25%, 일본 75%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기초예절교육과 관련하여 官報에 제시된 내용³⁵⁾을 보면 인성의 핵심을 1)아름다운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감동하는 마음과 부드러운 감성 2)정의감이나 공정함을 존중하는 마음 3)생명을 소중히 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윤리관 4)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사회 공헌의 정신 5)자립심과 자기억제력 및 책임감 6)타인과의 공생과 관용의 마음이라고 제시하

33) 官報 第16782号 付録, 1983年 1月 12日, 總理府

34) 官報 第11386号, 1989年 11월 24일, 문교부

35) 官報 第3572号 付録 平成15年 3月 26日 資料版 No.2308 平成14年度 文部科学白書のあらまし -新しい時代の学校-進む初等中等教育改革- 文部科学省

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의 도덕 교육에 대해서는 「新學習指導要領」에 선악의 판단,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체험활동 등의 개선을 도모하고, 도덕의 내용을 알기 쉽게 나타낸 ‘마음의 노트’를 작성·배포하거나 지역의 인재 및 다양한 전문 분야의 사회인을 ‘마음의 선생님’으로 학교에 배치하는 시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文部科學省의 교육개혁과 관계되는 심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교육개혁의 구체적 대책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시키던 중 아동 예절 교육의 자세에 대해 1)가정교육의 기본자세 2)사회 전체의 도덕성 향상 3)학교 도덕교육의 재검토에 대해 구체적인 제언을 하고 있다.³⁶⁾

한국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2010)의 「초·중등 창의·인성교육강화」³⁷⁾정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창의·인성교육 정책의 추진 배경으로는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의 변화,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살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되는 미래사회에는 지식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요구,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 경쟁력은 결국 인성이 뒷받침된 창의적 인재의 경쟁력이 좌우한다는 것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학교교육으로는 이러한 창의적 인재양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첫째, 그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학습분량, 획일적인 교육내용, 주입식 교육방식, 암기 및 문제풀이식 학습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둘째, 창의·인성교육은 교과내용과 구분하여 단편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재량특별활동도 교과교육 연장선상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학생들도 현장감이 결여된 이론중심의 반복학습으로 높은 학업성취수준에 비해 학업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은 크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은 기초예절교육 정책에서 아이들의 바람직한 사회환경 적응을 위해 기초예절교육을 정부, 학교, 가정,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시행방법에서는 일본이 도덕교육의 충실과 학교 내외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고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응한 교육상담체제에 충실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기존 학교교육 문제점을 보완하여 창의·인성교육 실시를 강화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일 양국에서 기초예절교육 정책이 시행된 배경으로는 사회의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 지식위주교육, 초고속인터넷문화 등으로 예절교육이 경시된 점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36) 官報 第2514号付録 平成10年 11月 25日 資料版 我が国の文教政策のあらまし -心と体の健康とスポーツ- 文部省

37) 교육과학기술부(2010) 「초·중등 창의·인성교육 강화」, pp.1-188
<http://www.mest.go.kr/web/1105/ko/board/view.do?bbsId=147&boardSeq=17445>

다음은 특기적성교육이다. 탈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의 특성을 띠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많은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초, 기본이 되는 지식을 탄탄히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그때그때 자신이 흥미 있고, 필요로 하는 지식을 끊임없이 생성하고 구성해내는 능력을 갖춘 자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특기적성교육은 학교교육에서 가장 강화되고 변화되어야 할 교육의 방향으로 강조되고 있다.(김수동 2000:3-4) 초등교육의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총 10건의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본의 경우는 「靑少年育成の基本的方向」³⁸⁾ 등 8건의 정책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체육장 없이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³⁹⁾ 등 2건의 관련 정책이 제시되었다. 양국에서 제시된 정책의 비율에서는 한국 20%, 일본 80%로 나타났다.

일본은 2002년부터 완전한 주5일제수업 실시를 계기로 「新子どもプラン」을 만들어 관계부처, 민간단체와의 제휴아래 지역의 인재를 활용한 아이들의 방과후 및 주말의 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였다. 가정과 지역에서 아이들과의 만남 및 대화의 기회를 넓혀감과 동시에 「子どもと話そう」라는 전국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그 일환으로서 「子ども霞が関⁴⁰⁾見学デー」을 시행하여 아이들에게 사회를 알아가는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 7월에는 「學校教育法」 및 「社會教育法」의 개정을 추진하여 학교 내외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봉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진행하였다. 또한 환경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학교교육, 사회교육 그 외의 다양한 장소에서 환경교육, 환경학습의 추진, 환경보전의 구체적 행동의 촉진이나 환경에 관한 정보 제공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전개했다. 그리고 단체·그룹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母親クラブ」등 아동육성단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청소년 단체가 실시하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 등 다양한 시책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⁴¹⁾

한국의 경우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방과후 학교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를 처음 개설하였을 때만 해도 전체 학생 가운데 절반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근 10명 중 8명은 정규 수업이 끝난 뒤 방과후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⁴²⁾ 수업 종류도 영어와 수학부터 컴퓨터와 미술 등 예체능까지 27개나 개설돼 있어

38) 官報 第868号 付録, 1992年 3月 18日, 総務庁

39) 官報 第13645号, 1997년 06월 28일, 교육부령제696호, 교육부

40) 霞が関(かすみがせき) : 東京都千代田区에 정부 중앙부처가 집중해 모여 있는 행정, 관공서, 관료의 대명사

41) 官報 第3472号付録 平成14年 10月 23日 資料版 No.2287 靑少年白書のあらまし 内閣府

42)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web/1148/ko/board/>)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정부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나, 방과후 학교 전용 교실 부족과 수준별 수업 도입 등 해결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⁴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은 초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 정책에서 개인의 자질이 나 다양성을 강조하는 특기적성교육을 학교교육에 적극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하지만 시행방법에서는 양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은 「新子どもプラン」을 만들어 관계부처, 민간단체와의 제휴아래 지역의 인재를 활용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활동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일 양국에서 특기적성교육 정책이 시행된 배경으로는 아동 개개인이 가진 재능과 적성이 다양한 상황에서 개개인의 특기적성을 살리는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관련 정책이다. 학교현장에서 바람직한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과 더불어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⁴⁴⁾ 구성원의 역할이 증대되어지고 있다. 초등교육의 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정책에서는 총 12건의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본의 경우는 「團體グループ活動の促進」⁴⁵⁾ 등 10건의 정책이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는 「각종 학교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⁴⁶⁾ 등 2건의 관련 정책이 제시되었다. 양국에서 제시된 정책의 비율에서는 한국 17%, 일본 83%로 일본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학교의 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官報에 제시된 정책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 주민·보호자가 학교 운영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지역 주민이 학교운영에 참가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운영협의회제도(커뮤니티스쿨)나 학교평의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지역과 가정의 연계·협력에 의한 학교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교육에 지역, 가정, NPO 등의 협력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1)뛰어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회인, 외부 인재의 학교 교육에의 참가 2)종합적인 학습의 시간, 체험활동, 캐리어교육, 외국어교육, IT교육에 대한 지역과의 연계 3)등교거부, 문제행동의 대응에 대한 학교와 지역·가정의 제휴 4)文部科學省의 NPO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제시하였다. 셋째,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43) 교육과학기술부(2010) 「초중고 99.9% 방과후 학교 운영」

44) 교육공동체란 교육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구성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이 교육 공동체에는 교육 관료와 교장 등 교육 행정 관리자, 교사 등 교육 담당자,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이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45) 官報 第17072号 付録, 1984年 1月 4日, 総理府

46) 官報 第11771号, 교육부령 제594호, 1991년 03월 16일, 교육부

학교에서의 사건사고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 2002년부터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학교시설 정비지침의 방법대책 규정의 개정, 학교 안전의 충실에 하드·소프트의 양면으로부터 종합적으로 임하는 어린이 안심프로젝트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교육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공동체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기 역할 분담이나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을 잘 해야만 교육공동체의 의의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공동체는 대립과 갈등이라는 공동체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공동체는 각 구성원간의 합의, 협조, 협력보다는 대립, 분열, 갈등 나아가 투쟁으로 인하여 교육공동체의 기능이 위축되고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공동체의 갈등은 보는 시각에 따라 교육의 심각한 위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한편에서는 우리 교육계의 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할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은 초등학교의 교육공동체 정책에서 교육의 투명성을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다양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시행방법에서는 양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은 학교교육에 지역, 가정, NPO 등의 협력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인재육성 정책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4. 결론

한일 양국의 초등교육정책을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 官報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대별 주요 특징과 정책의 특징 즉, 기초교육증진을 위한 정책, 정보화사회대응을 위한 정책, 인성교육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분류하여 비교 고찰해 보았다. 먼저 초등교육정책의 각 시대별 주요 정책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상대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1980년대를 살펴보면, 먼저 일본은 「教育課程審議會答申」의 취지에 따른 「新學習指導要領」이 1980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초등학교의 수업시수를 줄이고 여유로운 학교생활 속에서 아동이 기초적, 기본적인 내용을 배워 知德體의 조화를 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한국은 교육혁신을 4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하면서 교육 정상화를 위한 7·30교육 개혁조치를 단행하여 ‘교육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 방안’과 교실개혁, 과학기술 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를 살펴보면, 먼저 일본은 21세기에 대비한 역량 있는 국가로 발전하고 과학기술입국, 문화입국을 목표로 모든 사회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교육에 대한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한편 한국은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열린교육,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를 살펴보면, 먼저 일본은 등교거부, 청소년 범죄, ‘公’을 경시하는 풍조 등 교육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개혁국민회의’의 제안을 근거로 ‘교양, 창의력, 새로운 학교 만들기’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한 시기였다. 한편 한국은 의무교육 개정과 교육자치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이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등 초등학교의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각 시대별 특징들을 기반으로 전개된 초등교육의 주요정책을 기초교육 증진, 정보화사회 대응, 인성교육 지원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양국의 정책을 비교분석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기초교육증진을 위한 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먼저 일본의 경우 아동 개개인의 자질이나 재능을 살리는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는 정책, 체험학습을 각 교과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는 정책, 유학생과 국제교류를 통하여 아동의 외국어교육을 지원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주요 교과과목 위주의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토론·컴퓨터 등 특성화 교육도 함께 추진하는 정책, 인터넷 맞춤형교육 서비스와 사이버가정학습을 추진하는 정책,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초·중등영어몰입교육 정책을 추진하였다.

둘째, 정보화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일본의 경우 밀레니엄·프로젝트 ‘교육정보화’를 중심으로 모든 학급, 모든 수업에 대해 교원이나 아동이 컴퓨터·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 기기 보급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는 정책, 정부의 「e-Japan 戦略」 등에 근거해 2005년까지 세계 최첨단의 IT국가를 목표로 하여 교육, 과학기술, 문화 등 각 분야에 관한 정보화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을 시행하여 모든 학교에 PC와 인터넷 등의 물적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에듀넷 등을 통해 ICT활용 및 보급, 교실수업 개선과 학생별 맞춤형 교수학습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개발 정책을 추진한 점이다.

셋째, 인성교육지원을 위한 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먼저 일본의 경우 도덕교육의 활성화와 학교 내외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고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응한 교육상 단체제에 충실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는 정책, 「新子どもプラン」을 만들어 관계 부처, 민간단체와의 제휴 아래 지역의 인재를 활용하는 정책, 학교교육에 지역, 가정, NPO

등의 협력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인재육성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기존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창의·인성교육 실시를 강화하고 정책,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정책, 교육공동체의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 등을 추진한 점이다.

【參考文獻】

- 김수동(2000) 「초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의 효율적 실행 방안 연구」, pp.3-4
 교육과학기술부(2011) 「창의인성교육기본방안」, pp.1-56
 _____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정보화 추진사업」, pp.1-35
 _____ (2011) 「(인재대국으로 가는 길)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 pp.1-43
 _____ (2010) 「초중고 99.9% 방과후 학교 운영」, pp.1-134
 _____ (2010) 「초·중등 창의·인성교육 강화」, pp.1-188
 _____ (2011)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정보화추진사업」, pp.1-201
 _____ (2011) (<http://www.mest.go.kr/web/1148/ko/board/>)
 이흥수(2008)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선방안 연구』, pp.1-3
 류영길(2011) 「韓日 兩國의 官報를 통해서 본 平生教育政策 연구」 『日語日文學』51, 대한일어일문학회, pp.219-243
 류영길·안병곤(2011) 「韓日 兩國의 官報를 통해서 본 高等教育政策 연구」 『比較日本學』51, 日本學國際比較研究所, pp.1-24
 _____ (2012) 「韓日 兩國의 官報를 통해서 본 中等教育政策 연구」 『日本語文學』51, 日本語文學會, pp.287-310

논문투고일 : 2012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21일

〈要旨〉

한일 양국의 官報를 통해서 본 초등교육정책

한일 양국의 각 시대별 특징을 기반으로 전개된 초등교육의 주요 정책을 기초교육증진, 정보화사회대응, 인성교육지원의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첫째, 한일 양국의 기초교육증진을 위한 정책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일본의 경우는 아동 각각의 자질이나 재능을 살리는 교육시스템으로 바꾸어가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주요교과목 중심의 지식교육만이 아닌 토론 및 컴퓨터 등과 같은 특성화교육을 함께 추진하였다.

둘째, 한일 양국의 정보화사회대응을 위한 정책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일본의 경우는 밀레니엄프로젝트인「교육정보화」를 중심으로 모든 수업에 있어서 교사와 아동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을 시행하여 모든 학교에 PC와 인터넷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셋째, 한일 양국의 인성교육지원을 위한 정책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일본의 경우는 도덕교육의 충실과 학교내외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의 촉진을 통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응하는 교육시스템으로 바꾸어나가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기존의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성교육실시를 강화해 가고 있다.

A Study on Elementary Education Policy through Official Gazette of Korea and Japan

We found the following by examining how the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education have changed over time: We studied government policy in S. Korea and Japan by 1) examining the way fundamental education is enhanced, 2) counteracting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nd 3) supporting personality education.

First, we examined the fundamental education enhancement policies of S. Korea and Japan. Japan focuses on shifting their education system to encourage each individual's talent. However, S. Korea has promoted discussion and computer in their education, but not only knowledge based.

Second, we examined the information-oriented counteraction policies of S. Korea and Japan. Regarding Japan, their policy is called the Millennium Project, while S. Korea has the Education Information-Oriented Total Development Plan. Both countries built a system in which educators and students use computers and the Internet for their learning environment.

Third, we examined the personality education support policy in S. Korea and Japan. In Japan's case, not only do they instill moral education in schools, but also they aim to be more responsive to students' problem behaviors by facilitating extra curriculum. S. Korea's case, they are trying to reinforce personality education by enhancing their existing curriculum.